

제주도 감귤산업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

김 필 환

감귤산업 현황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농산물로 쉽게 감귤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생각도 우리 제주농민들은 '머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한때 감귤나무를 "대학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만큼 감귤산업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컸고,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도 총생산액의 25%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큰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99년부터 견잡을 수 없이 가격하락세

를 보이며 추락하기 시작한 감귤산업은 4년째 바닥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 감귤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경락가는 2002년도 산 감귤 한 상자(15kg)당 2천원 수준으로, 운송비와 포장비가 3천원임을 감안할 때 농가에서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팔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실패로 무너져 가는 제주감귤

제주도 감귤산업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으로 "무분별한 과일

● 감귤산업 현황

구 분	내 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재배면적	25,800ha	25,823ha	25,796ha	25,408ha
생산량	63만톤	63만9천톤	56만3천톤	64만6천톤
GDP비중	25.3%	25.7%	22.3%	16.7%
농가부채	1,869만원	2,571만원	2,934만원	3,084만원

류 수입“과 “감귤의 공급과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정책실패”, “중앙정부의 안일한 대처” 등을 들 수 있다.

과일류의 수입개방대책이 전무했던 상황하에 속수무책 들이닥치는 과일류, 특히 오렌지의 범람은 감귤제고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97년부터 오렌지의 수입량이 킬로그램을 넘어 서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10만톤, 2002년에는 13만톤을 넘어서면서 감귤의 소비부진을 부추겼다. 수입오렌지 13만톤은 제주도 감귤생산량의 약 20%에 달하는 물량으로, 감귤이 수입개방의 가장 상징적인 피해작목이 된 것이다.

감귤공급과잉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은 “감귤의 생산예측이나, 생산조절, 출하조정 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시행했어야 함에도, 적정생산량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치만을 제시한 채 이를 쫓아가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당초 지방정부에서 제시한 적정생산량 60만톤이라는 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수입과일류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해졌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감귤 휴식년제나 폐원, 간벌과 가지치기 등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결국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달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정부가 가격폭락의 원인을 “농민들의 저급품 출하에 기인한 것”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어, 더욱 정부정책의 부재와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앙정부는 또 어떠한가?

기존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 이런 상황을 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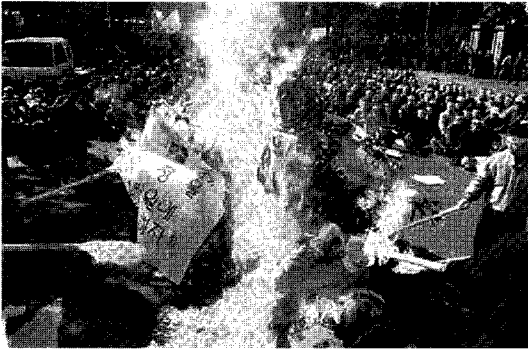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하기에는 자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한 도의 주력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농업수호의 의지로서 긴급히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이를 방관만 하고 있었기에 더욱 사태가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제주도 감귤사태는 제주도농업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WTO체제 하에 앞으로 더욱 거세게 밀어닥칠 농산물개방의 먹구름은 국내 모든 작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귤가격 폭락사태가 국내 농업 전반에 걸쳐 똑같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의 비근한 예로 공산품 수출에 눈이 멀어 농업수출국이면서 케언즈그룹에 속해 있는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목메어하는 정부의 작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실로 위험스럽고 끔찍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식량주권을 잃고 빌어먹는 국가로 전락하겠다는 몸부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지방정부, 중앙 정부를 따질 것 없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의 제주도 감귤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향후 WTO체제 하에서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취하게 될 정부의 농업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작금의 감귤사태를 향후 WTO체제 하에서 정부가 펼치게 될 농정의 첫 단추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행동으로 우리 제주도연합회는 지난 2월 20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우리는 결국 “처리난을 겪고 있는 감귤 9만7천t을 kg당 200원에 구매하여 산지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지방정부로부터 얻어냈다. 하지만, 이것이 향후 제주감귤산업의 회생대책은 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 대안 제시를 통해 안정적 영농활동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농민단체간 연대를 통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한농연**

우리의 요구

첫 번째, 농정당국은 2002년산 감귤 잔여물량에 대하여 1Kg단위 최소 200원 이상으로 농가희망 전량을 구매하고 산지 폐기 처리하라!!!

둘 번째, 농정당국은 2003년에 도래하는 영농자금 및 각종 농업경영자금 상황에 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셋 번째, 농·감협은 2월말 상환 도래하는 각종 농자재 대금에 대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라!!!

넷 번째, 농·감협은 감귤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감귤자조금 구성에 적극 임하라!!!

다섯 번째, 도지사는 감귤농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사과하라!!!

여섯 번째,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하고,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